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준·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인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도안·하하·나우리 PSPD 유·텔 :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pspd.org / 인터넷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NGO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납세자운동본부 담당 : 이경미 : T. 723-4253 , taxpayer@pspd.org)
제 목 일본 예산감시 운동과 주민 소송제도 설명 기자 간담회 안내
날 짜 2000년 11월 13일 (월) (총 4 쪽)

보 도 협 조 요 청 서

일본 예산감시운동의 기수, 다카하시, 타니아이 변호사에게 듣는다

- 일본의 예산 감시 운동과 주민 소송제도 설명 기자 간담회

일시 및 장소 : 2000년 11월 14일 (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제2회의실

1.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초청으로 방한한 일본 전국시민옴부즈맨연락회의의 타니아이 슈조 변호사(동경시민옴부즈맨 사무국장), 다카하시 토시야키 변호사(전국 시민옴부즈맨연락회의 전 대표)는 2000년 11월 14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제2회의실에서 '일본의 예산 감시 운동과 주민 소송제도'에 관한 기자 간담회를 갖는다.
2. 최근 일본에서는 납세자들이 나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시민옴부즈맨'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옴부즈맨운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해 정보를 공개받고, 공개받은 정보를 분석해 예산낭비사례가 적발되면 납세자 소송을 제기해 환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민옴부즈맨 운동단체들의 전국적 네트워크가 '전국시민옴부즈맨연락회의'이며,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방문한 타니아이, 다카하시 두 변호사이다.
3. 일본의 '전국시민옴부즈맨연락회의'는 우리의 판공비 격인 식량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관관접대' 등의 공금유용사례를 밝혀내었고, 그에 따라 연간 3,000억원에 달하던 예산낭비를 근절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이외에도 '전국시민옴부즈'

맨연락회의'는 입찰담합, 허위출장, 지방의회의 낭비성 여행에 대해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4. 타니아이, 다카하시 변호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최근 예산감시운동의 현황과 주민소송제도에 대해 설명을 할 예정이며, 기자간담회 후에는 오후 2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의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에 발제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 별첨자료 1. 일본 전국 시민옴부즈만 연락회의 소개

전국시민음부즈맨 연합회의 소개

오늘 발표를 하는 타니아이 변호사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동경시민음부즈맨은, 일본 전역에 걸친 네트워크 조직인 전국시민음부즈맨 연합회의 소속단체로서,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일반시민 자원활동가들이 정보공개제도와 납세자 소송(주민소송) 제도를 통해 정보공개·예산감시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이다. 그리고 타니아이 변호사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다카하시 변호사는 전국시민음부즈맨 연합회의의 대표간사를 맡았었고, 일본의 개혁적 법률가모임인 '일본민주법률가협회'의 대표간사도 맡고 있으며, 현재 일본의 정보공개·예산감시 운동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 아래의 글은 일본의 전국시민음부즈맨 연합회의의 활동에 관한 소개글이다.

일본을 세탁한다 : 전국시민음부즈맨 연합회의

시민음부즈맨운동은 공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감시활동으로부터 출발

최근 몇년간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아니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있다. 바로 '시민음부즈맨'이라고 하는 단체들이 그것이다. 이 단체들은 일본의 관료사회에 만연해 있던 비밀주의, 예산의 부정사용을 근절시킴으로써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겠다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본래 음부즈맨은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정부에 대한 고충을 처리하고 그것을 감찰하는 제도로 스웨덴에서 시작하여 세계 약 40여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일본의 '시민음부즈맨'은 법령에 의해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민이 스스로 음부즈맨을 자처하고 나서서 공금의 부정사용을 감시하는 운동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시민음부즈맨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시민음부즈맨은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제도화된 것도 아닌데, 시민이 스스로 음부즈맨을 자처하고 나서서 활동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일본에서도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고, 비교적 중립적이라고 하는 감사위원(일본의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독립기관이다)조차도 부패나 공금유용에 대해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는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이 스스로 나서서 세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자는 시민음부즈맨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시민음부즈맨들이 활동을 통해 가장 큰 성과를 낸 것은 관관접대문제이다. 시민음부즈맨들은 '관관접대'(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나 상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접대하는 것을 말한다)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식량비'에 대해 감시를 함으로써 만성화된 예산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전국시민음부즈맨연합회의 소속 단체들은 1995년 4월 25일에 식량비에 대하여 제1회 전국일체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집계하였는데, 전국적인 식량비 총액은 30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 중 압도적인 부분이 관관접대에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결과에 바탕하여 나고야에 모인 전국시민음부즈맨 연합회의의 소속 단체들은 '관관접대의 근절을 위한 나고야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직후부터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같은해 9월25일에는 코지(高知)현 지사가, 그 다음날에는 미야기현지사가 관관접대를 전면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이후에도 전국시민옴부즈맨연락회의는 매년 식량비, 교제비, 관급공사 입찰가, 출장여비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세금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일제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정보공개도 랭킹'을 매겨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오즈게(지방자치단체 산하 토지공사들이 불필요한 토지를 사서 오랫동안 묵혀두고 있는 것)와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정보공개청구와 주민소송 제도를 이용한 활동

시민옴부즈맨 활동의 특징은 정보공개제도와 주민소송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시민옴부즈맨은 공금유용 등의 비리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내어 왔다. 그리고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추궁을 한다. 주민소송은 일본의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를 입힌 공무원이나 사인(私人)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보를 받아내서 분석하고,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의 활동으로 시민옴부즈맨 운동은 폐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유용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하는 성과를 거두어 온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주민소송 제도가 없었다면 시민옴부즈맨 활동이 그만큼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다.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조직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많은 지역의 시민옴부즈맨들은 별도의 사무실이거나 상근자가 없다는 점이다. 별도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는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을 연락사무실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시민옴부즈맨 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전국시민옴부즈맨연락회의'는 매년 1번 전국대회를 열고 있으며, 2달에 1번 간사회의를 열고 있다. 간사회회에서는 토론을 통해 정보공개청구할 항목을 선정한다. 2000년도에는 동경에서 전국대회가 열렸으며, 47개 도도부현에 있는 시민단체 82개가 참여했다.